

● 야생 호랑이 보호 위해 인도 ‘호랑이청’ 신설키로

인도 정부가 야생 벵골 호랑이를 보존하기 위해 ‘호랑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지난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라자 환경·산림부 장관은 “호랑이청 신설을 포함한 야생동물 보호법 수정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했다”며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 관련 범죄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자 장관은 “두 기관이 신설되면 야생동물 서식처에서 밀렵꾼들을 몰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의 명물 벵골 호랑이는 1947년 조사 당시 4만 마리를 넘었으나 최근엔 3700마리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2000마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야생 호랑이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국제 암시장의 시세가 마리당 5만 달러(약 4800만원)를 웃돌면서 밀렵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만만한 싱 총리는 얼마 전 호랑이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경찰에 강도 높은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

인도 정부는 70년대 야생동물 보호법을 제정해 밀렵을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고 동물 보호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야생동물단체 관계자들은 “호랑이는 호피(虎皮)뿐만 아니라 뼈가 한약재로 인기가 높다”며 “중국 등이 암시장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밀렵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 2006년 8월 28일

● 나 아픈 데 없는데요?

8월 22일 중국 장쑤성의 난징농업대학 동물병원에서 한 애완견이 디지털칩을 몸속에 심는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다. 이 애완견은 애완동물등록기관에서 등록절차를 밟아 ID를 발급받은 뒤 자신과 주인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작은 디지털칩을 피부에 이식받았다.

애완동물등록기관은 등록된 애완동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시스 / 2006년 8월 25일

국내 소식



● 우리나라, 세계자연보전연맹 국가회원 가입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9월 1일 세계자원 및 자연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82번째 국가회원으로 가입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유엔의 지원을 받아 1948년 국가 또는 정부기관, 비정부기구(NGO)의 연합체 형태로 창설된 자연보호 국제기구로 유네스코 자연유산 심사, 멸종위기 동식물 국제 거래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자연현장 등에 기초한 국제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환경부가 정부기관 회원으로 1985년 가입했고, 민간단체인 자연보전협회와 야생동물보호협회, 국립공원협회,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등 4개 민간단체가 NGO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기관 회원에서 국가 회원으로 우리나라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기존 1장의 투표권이 3장으로 늘어나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강화돼 자연보전 분야의 국제적 외교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은 81개 국가 회원과 109개 정부기관 회원, 800여개 비정부기구, 1만여명의 자연보호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국은 유엔 분담률에 따라 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파이낸셜뉴스 / 2006년 8월 31일

● 일부 유통 육류서 기준초과 항생제 검출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소, 돼지, 닭고기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

항생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육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몸에 병이 나도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4개 도시의 백화점, 할인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과 외국산 육류 222점을 수거해 항생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 돼지, 닭고기 각각 1개 제품에서 잔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부산 T마트의 닭고기 1개 제품에서는 합성항균제인 엔로플록사신이 0.512ppm 검출돼 기준치(0.1ppm)를 5.1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 S시장의 쇠고기에서는 항생제인 테트라시클린이 기준치(0.25ppm)보다 1.5배 많은 0.372ppm, 광주 L마트의 삼겹살에서는 옥시테트라시클린이 기준치(0.1ppm)보다 1.7배 많은 0.169ppm이 각각 검출됐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이 밖에 조사대상 소, 돼지, 닭고기 각 3개 제품씩 9개 제품에서는 옥시테트라시클린, 테트라시클린, 설파메라진, 엔로플록사신 등의 항생제가 허용기준 이내지만 일부 검출됐으며, 나머지 제품에서는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항생제가 잔류허용 기준보다 많은 육류를 계속 먹으면 몸에 약물저항성이 늘어난 내성세균이 출현해 질병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축산물에 항생제가 남게 된 주된 이유는 축산농가에서 출하 전 동물용 의약품 사용이 금지되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출하 15~30일 전부터 약제 무첨가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도 먹이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은 또 축산농가에서 동물약품의 수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하는 게 아니라 자가치료나 예방용으로 투여하는 점도 항생제가 남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은 ▲축산농가 교육 강화 ▲잔류기준 위반 농가 사후관리 강화 ▲수의사 처방에 의한 동물약품 사용 의무화 등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2006년 8월 31일

🌐 병·의원 항생제 사용 대폭 줄어

복지부, 9천86곳 조사결과 발표..목감기 항생제 처방률 12.4P↓

일선 병·의원의 항생제 사용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급성상기도감염(목감기)의 항생제 처방률을 첫 공개한 이후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올 2~4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63.8%에서 51.4%로 12.4% 포인트나 감소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종합전문병원 38곳과 종합병원 120곳, 병원 167곳, 의원 8천761곳 등 전국 9천8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의원이 64.2%에서 51.7%로 12.5% 포인트 줄어드는 등 처방률 감소폭이 가장 컸고 다음이 병원 9% 포인트(50.2%→41.2%), 종합전문병원 8.3% 포인트(46.0%→37.7%), 종합병원 7.9% 포인트(50.4%→42.5%) 등으로 조사됐다.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전에는 연평균 2.2% 포인트 정도 감소했었다.

특히 지난해 항생제 처방률이 80%를 넘은 의료기관의 경우 이번에는 15.4% 포인트나 처방률이 줄어들었다.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항생제 오·남용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하면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액도 지난해 2~4월에 비해 3개월간 55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올해 전체로는 220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복지부측은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 제왕절개 분만율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율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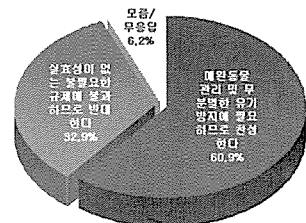
연합뉴스 / 2006년 8월 31일

🌐 “애완동물 등록제 필요하다” 60.9%

애완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동물들이 많아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일정한 금액을 내고’ 등록해 관리하는 등록제 도입에 대한 조사에서는 60.9%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2.9%였다. 이는 8월 24일 조인스닷컴이 미디어다음·리서치앤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사회지표분석 ‘조인스풍향계’(research.joins.com)의 제 18차 조사 결과이다.

‘찬성’ 의견은 여자(66.9%), 40대(67.7%), 가정주부(66.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 의견은 남자

【애완동물 등록제에 대해】



(39.7%), 50대 이상(38.8%), 중졸 이하(45.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애완동물 등록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함에도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의 과반수(55.1%)가 찬성의견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이는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중 현재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람은 17.3%, 키우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82.7%로 나타났다.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579명)에 대해,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변 이웃들의 애완동물 관리상태가 어떠한지를 물어본 결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6.6%였다.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40대(78.5%) 및 50대 이상(73.9%)에서 특히 높았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19~29세: 45.9%),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33.6%), 학생(45.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제주도 제외) 700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pm 3.7\%$ 포인트.

중앙일보 / 2006년 8월 24일

양산시, 유기견 증가 보호소 설치키로

올들어 양산지역에서 버려지는 애완견의 수가 증가하면서 양산시가 유기동물보호소 설치를 추진한다. 8월 24일 양산시에 따르면 올들어 유기된 채 발견된 애완견의 수가 한달 평균 12마리에 달하면서 현재까지 100마리를 넘어섰다는 것.

이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지난해 120여마리보다 30여마리 늘어난 150여마리에 이를 것이라는 게 시측의 전망이다.

특히 유기견들은 대부분 애완용 품종으로 나이가 많거나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발견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사료비나 치료비에 부담을 느낀 소유주들이 애완견을 몰래 버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600여평의 부지에 유기동물보호소를 건립,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에게 인식표 등을 반드시 부착토록 홍보, 길을 잃은 동물들이 손쉽게 주인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기견으로 인한 각종 전염병 발생이나 교통사고 우려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호소를 건립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현재 50% 가량인 분양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 2006년 8월 24일

④ 소 등 가축에 한 해 항생제 5t트럭 187대분 사용

지난해 축산 농가에서 사용한 항생제는 5t 트럭 187대 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2일 농림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김영덕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량은 936여t에 달했다. 이는 2004년의 908여t에 비해 28t 가량 증가한 것으로, 소에는 마리당 평균 38.8g, 돼지는 69.8g, 닭은 2g의 항생제가 투여된 것이다.

김 의원은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과다 투여는 인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축산농가가 아무런 제약 없이 항생제를 구입하고 있는데, 외국과 같이 항생제의 수의사 처방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육 두수에 따라 항생제 구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 2006년 8월 23일

④ 전문직사업자 소득과약 강화한다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전쟁에 나선다. ‘의료비 소득 공제’로 의사를 압박하는 데 이어 변호사에게도 창을 겨눴다. 의사, 변호사 등을 넘지 않고는 자영업자 세원 파악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다.

우선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문직 사업자대상을 늘렸다. 현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관세사 등 6개 업종에 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등 9개 업종이 추가된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수입료 등 수입 내역에 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변호사는 사건 수입건수와 수입료 등 구체적인 과세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회는 이를 다시 국세청에 제출, 과세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현재 변호사는 의뢰인 인적사항, 수입사건의 내용 등 소득과 관계없는 자료만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 왔다. 과세 당국의 소득파악은 불가능하다. 변호사의 경우 자신이 신고한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 온 셈이다. 법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 사업자가 법무사회, 공인회계사회에 수입료 등의 과세자료를 내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이 아닌 변호사법을 고쳐야 한다. 법무부 소관법인데다 울산 출신 의원들이 준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넘어야 한다. 정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자연적으로 안 되면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 법무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변호사를 옥죄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사업용 계좌’도 변수다.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도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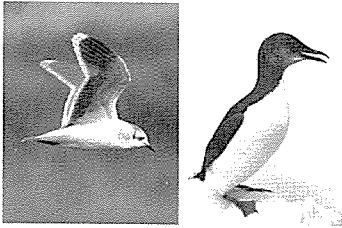
종전에는 전문직 사업자라도 연간 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됐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과돼 모든 거래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전체 사업자 436만명(2004년기준)의 약 14%인 60만명 내외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자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의료 사업자가 포함된다.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벌칙도 강화했다.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사업용 계좌 개설과 현금영수증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도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머니투데이 / 2006년 8월 21일

🌐 국내 미기록 겨울철새 2종 확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전국 127개 내륙 및 해안 습지에서 겨울철 조류 센서스를 벌여 국내 미기록 조류인 큰부리바다오리(사진 오른쪽) 3마리와 꼬마갈매기 1마리를 확인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이들 조류는 각각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해상과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에서 관찰됐다. 큰부리바다오리는 유라시아 북극 해안, 알래스카 해안, 일본 북해도 동부 해안에 서식하며, 꼬마갈매기는 바이

칼호에서부터 러시아 동부까지 주로 내륙 습지에 서식하는 종이다. 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조류 13종 중 8종 942마리가 관찰돼 센서스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겨울철새는 195종 122만7000여종이 발견돼 지난해 182종 118만6000여마리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 겨울철새 센서스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철새가 관찰된 것으로 기록됐다. 겨울철새 중 가창오리가 27만마리로 가장 많았으나 2004년 이후 감소했다.

세계일보 / 2006년 8월 21일


🌐 경찰청, 의학박사 등 검시 전문가 29명 선발

변사사건의 급증과 더불어 사인규명 논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변사사건의 정확한 사인규명과 효율적인 검시시스템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찰청은 연간 2만여건에 달하는 변사사건의 사인규명과 효율적인 검시시스템 확보를 위해 의학 간호학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시 전문가 29명(7급 10명, 9급 19명)을 선발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선발된 검시 전문가들은 의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생물학 수의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분야 전공자로서 7급의 경우 10명을 모집한 결과 박사 학위 소지자 등 76명이 지원 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9급의 경우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9명을 모집한 결과 756명이 응시하여 39.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7급 합격자 10명 중 3명은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의학 2, 생물학 1)로서 이들은 변사체 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찰수사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2006년 8월 20일